

한국사회정책 편집인의 글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총 일곱 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 비교사례분석: 핀란드, 스페인, 독일, 한국을 중심으로”(김규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 위험은 높아졌지만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실업에 대처하는 소득보장체제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함의를 얻기 위해 다층형 실업보장체제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그 구조와 내용에서 이질성을 가지는 핀란드, 독일, 스페인을 비교연구 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실업보험, 실업부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공공전달체제 개편 실험과 대안 모색: 보건복지전달체제 강화 시범사업에 기반하여”(민소영)는 2020년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보건복지전달체제 강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이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의 시범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이용자 맞춤형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평가 기준(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적절성)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등 현장 중심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전달체제 개편 실험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제시하고, 조직과 인력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박형준)는 소득 관련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과세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각 자료에서 소득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지를 비교하고, 국세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정보를 구성하는 것의 결과와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와 사회조사의 원천별 소득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 측정 방식이 상이한 경우 등 사회조사와 과세자료의 소득

정보가 다른 원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비정형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 과세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유의할 점 등 소득 관련 연구자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활용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중심으로”(김도균)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이 복지확대에 부정적이고 복지확대를 선호하더라도 그를 위한 증세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주택소유에 따라 복지태도가 영향을 받고 주택보유 여부나 자가마련 부담에 따라 복지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분석을 통해 소득보다 자산 규모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저자산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그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며 이러한 경향이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두드러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과 심화하는 자산불평등이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토대를 취약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지은정)는 정년연장과 같은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청년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세대 간 일자리경쟁 담론의 적절성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색합니다. 이 연구는 20대와 50대 이상의 집단 모두에서 정규직, 소득, 4대 보험 적용을 기준으로 한 일자리의 질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고령자가 경쟁관계에 있다거나 양 집단이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일자리문제를 세대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적절하다고 보고합니다.

“다차원적 불안정 노동의 가족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경험 연구”(고태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량 실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당사자의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서술합니다. 노동자 가족의 경험을 통해 실업과 해고로 삶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의 가족화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이를 한국사회에 팽배한 가족책임담론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연구: 여가제약을 중심으로”(신진호, 홍서윤)는 등록장애인의 여가활동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대신 장애유형과 연령대 등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욕구 파악과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두 편의 서평을 신고 있습니다.

김윤태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1987년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이해와 선호와 권력자원 및 그를 바탕으로 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김영순(2021),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전용복 교수(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 Charles Goodhart, Manoj Pradhan(2020), 『인구 대역전 : 인플레이션이 온다』(원제: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Ageing Societies, Waning Inequality, and an Inflation Revival)를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이번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2호에 실린 논문과 서평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 6. 30

편집위원장 **박정민, 윤자영**